

제 1 차 농지제도 자문단 회의 결과보고

2025.12.2.(화) 농어촌정책팀

1. 개 요

- 일시·장소 : 2025.11.26.(수) 13:20~15:00 / 위원회 대회의실
- 참석인원 : 16명(위원 8, 위원회 5*, 농식품부 2, 해수부) ※ 불임 참조
* 김호 위원장, 엄성준·이은영·양호섭 팀장, 김선우 사무관
- 회의결과 : 자문단 운영계획·방향 설정, 농지제도 개편방향 논의 등

2. 회의결과

- 자문단 구성·운영 → **단장 조병옥 선정, 주 1회 집합회의 추진**
 - 12월까지(3~4회) 운영, 집합회의 원칙, 개별 법안과 세부 쟁점을 병렬식으로 다루는 방식의 결론 도출은 어려움
 - 과거 정책 논의라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 역시 원칙 부재와 논의 구조 분산에 있다는데 인식 공유
- 농지법 33가지 개정안 → **우선 찬반 논쟁보다, 농지정책 큰틀 확정**
 - 법안의 개별 검토보다 농지정책의 대원칙을 우선 설정, 해당 원칙에 따라 법안을 유형화·단계화해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
 - 경미한 사안은 우선 처리, 파급력 큰 쟁점은 충분한 공론화와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다루는 원칙 확립

□ 농지정책의 기본가치 확립 → 경자유전.식량주권 중심

- 단순 사유재산이 아닌,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기반 자산으로 현장의 여건과 농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칙만 강조하는 것은 한계
- 보전이라는 가치만으로 정책을 추진키 보다, 필요성을 데이터로 설명하고, 완화·효과 및 부작용을 계량적으로 검증, 설득 가능한 정책체계 구축 필요

□ 가격 하락, 거래침체 완충장치 마련 → 보전보안보상 패키지 정책 추진

- 고령농, 은퇴예정 농업인의 경우 농지가 사실상 생계 자산으로, 보전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사회적 반발과 정책 불신 심화
- 반드시 농가의 자산·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설계 필요, 보전은 하되 정책 충격을 완화할 보완책 없이 접근은 지양

□ 농지 데이터 정비, 총량개념 확립 → 통합 DB구축, 총량산정, 정책설계

- 농지대장, 실경작 현황, 행정정보 간 불일치 정확한 농지 총량조차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, 현 상황에서 농지정책의 기본가치 확립은 무의미
- 모든 농지정책의 출발점은 정확한 실태조사 및 통합데이터 구축임, 정책 논의의 순서를 데이터확립→총량산정→정책설계로 전환해야 함

□ 상속·유휴농지의 공적 관리체계 전환 → 공공이 관리 개입

- 고령화 심화로 농지가 비농업인 소유로 이전되거나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음, 이는 농지의 분절화·기능상실로 이어짐
- 상속·유휴농지는 공적 관리체계로 편입, 매입이 아닌 위탁·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농업 현장과 연결하는 구조적 접근 필요

3. 향후계획

- 2차 자문단 회의 개최(12.5), '21년 농지법 개정후의 변화 등 토론